

활력있는 민생경제

경제 정책 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물가관리·대응 예산
총 **10.8조원** 지원

과일
수입확대

공공·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운영

-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 다세대·다가구 지원
- 공공임대 공급
- 임대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응원
3대패키지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업체당 20만원



2.3조원+α 규모
이자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소비 회복세 확대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 적용



-개소세 ▲70% 한시 인하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24)

-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내국인 관광
활성화



방한관광객 유입 촉진:
2천만명 달성 목표



- '24년 수출 7천억불 돌파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초대형수주 특별프로그램」
신설 검토

-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24)

세제지원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금융지원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하여
「투자익스프레스」 신설,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애로해소

지역경제·건설경기 활성화



거점지역



4대 특구 본격 추진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특례
도입 추진 등



인구감소지역



생활·방문·정주인구 확대 등
3대 분야 전폭 지원

생활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방문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정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공공	상반기 집행률 목표 55%(역대 최고)



☑ 한시 규제특례 등
투자여건 개선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100%)
학교용지부담금(50%) 감면('24)

☑ 공공부문 주택공급
추가확대,
택지사업 가속화

▶ 부동산 PF 연착륙



**유동성
공급**

- PF 시장에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 85조원 수준 공급 프로그램 조속히 집행



**PF
사업장
정상화**

- PF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등) 마련('24.上)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양적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27)



질적 개선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50% 수준 상향
관리(~'27)

▶ 공급망안정 확보

대응체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및
공급망 위험
대응체계 구축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 확대
(수은, 20→22조원)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용자금 감면비율 상향

에너지 안보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공급망기본



▶ 금융 건전성 제고

-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금융기관 규제 완화
조치 연장(~24.上),
채권 수급 개선 등



공매도 제도
근본적 개선



-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혁신 생태계 강화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HIGH5+
향후 3년간 150조원+α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 위한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공정한 기회 보장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등 규제 개선
- 과도한 자영업 영업규제 완화
-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사회 이동성 제고



청년·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정책 지원 강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세대 부담 완화 위해
건전재정 기초 견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구축



▶ 인구·기후 위기 대응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2

결혼·출산·
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3

실버타운·
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4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 미래세대 기회 확대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 금융상품 지원확대